

국힘 원 구성 합류… 민생국회 문 열렸지만 검찰개혁 ‘전운’

오늘 의총서 7개 상임위원장 선출
형소법 개정안에 정국 급랭 우려
민주당, 국회법 개정 추진 예정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 작업에 착수하면서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정상 운영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이라는 초거대 쟁점 압박이 다가오고 있어 이와 맞물려 민생·경제 입법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천권 협상을 합의하면서, 원 구성 보이콧을 외쳤던 국민의힘에 숨통이 트였다. 국민의힘은 22대 후반기 원 구성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몫의 7곳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이만희(보건복지위원장)·김성원(산자중기위원장)·김희정(교육위원장)·임이자(성평등가족위원장)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여당과의 합의에 따라 정보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맡는다. 김정재·송석준 의원은 국토교

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다만, 국토교통위원장은 4선의 유의동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김정재 의원과 경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관련 입법을 논의할 산자중기위

원장을 가져간 것이 눈에 띈다.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기국회 내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은 의사일정 작성권과 회의 진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회의 자체를 열지 않으면 법안 심사는 지연된다. 민주당도 이를 인식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곧 수정안을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생·경제 입법 논의를 집어삼킬 블랙홀 같은 쟁점이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하반기 정국은 초반부터 급랭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2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시

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수정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된다”면서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무너트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때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반복해 왔다”며 “그래서 국민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 보호법’, ‘방탄 입법 시즌2’라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 땀 시장직 상실

명태균 여론조사 2100만원 대납 혐의
법원,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알면서도 인정 안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행위를 하나의 정치자금 제공 과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시 목적과 결부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납된 금액이 21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조사 가운데 3차례는 공표됐고, 7차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오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의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 문항을 주고받는 등 조사 과정에 관여했고,

김씨가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부담시켰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도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진 기자 lhyj@



오세훈 서울시장의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靑 “美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예의주시”

산업장관·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예정

청와대는 22일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방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7월 24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면서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찾았다. 무역법 301조 관세는 오는 24일 만료될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한다.

우리나라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실시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조사에서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발표됐다.

‘강제노동 관세’는 10~12.5% 범위로 부과될 계획이고, ‘과잉생산 관세’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와인 등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북동부 대기를 뒤덮자 ‘캐나다가 손해를 배상하든,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든 해야 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책임 강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재
복지부, 공공의료 강화 전략 발표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2일 공공·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수가 문제나 의료사고 관련 책임을 국가가 해결해야 공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지역의료 역시 공적 역할 강화에 초점을 뒀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어디에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모자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모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선 공공보건의료원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어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그 때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면 인정된 치료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산부인과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법정에서 이렇게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실, 즉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나, 이걸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경험 때문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이런 위험 영역에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상당히 이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생긴 공공·필수·지방의료 공백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기에 제도를 보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줌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모자의료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원 도입 외에도 전국을 대진료권(5·3특), 중진료권(1~8개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지역 연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모자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현재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삼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 단위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syj@